

		보도참고자료		
		배포일시	2019. 5. 12.(일) / 총 3매(본문 3매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	담당자	•과장 김동준, 사무관 김종욱, 주무관 안승현 •☎ (044) 201-3823, 3832, 3827	
	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	담당자	•과장 김윤희, 서기관 한은숙 •☎ (044) 202-7994, 7543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“국토부 · 고용부와 함께 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 · 지원한다.”

5월 12일 국토교통부 - 고용노동부 합동 연석회의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4월 29일 버스노조(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)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따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5월 12일 15시에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자: (고용노동부) 장관, 노동정책실장, 노사협력정책관, 근로감독정책관
(국토교통부) 장관, 교통물류실장, 종합교통정책관 등

- 지난 5월 8일부터 전국 13개 지역에서 파업을 위한 투표가 진행되어 현재 11개 지역의 노조에서 파업을 찬성하였으며, 노·사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노조는 15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.
-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올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.
- 정부는 이번 쟁의 조정 신청이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,
 - 지난, 5월 9일 전국 17개 시·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였다.
 - 또한 오는 5월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(5월 14일)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.
-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(48개)에 설치된 '노선버스 상황반'(5.3~)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
 -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하고,
 - 5.14(화)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'노선버스 대책 회의'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,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.

* 5.10(금) 노동부차관 주재 지방노동관서장 노선버스 대책 회의 旣 개최

- 특히, 양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, 정부·지자체와 노·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.
- 또한,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,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·사 타협을 이끌어내고,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.

□ 국토교통부는 '18년 말에 노·사 합의를 바탕으로 「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」을 발표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.

○ 우선 버스업체의 인력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2월 15일 시외버스 및 광역급행버스의 요금을 인상하였으며,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하여 버스기사를 양성하고, 국방부와 협력하여 운전직 제대 인력이 버스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.

- 또한, 지자체가 수요가 부족한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, 노선 조정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공공형 버스 및 100원 택시 투입을 지원하고 있다.

○ 이와 함께, 광역버스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광역버스 사무를 단계적으로 국가(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)사무로 전환해 나가고,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:1 밀착관리를 통해,

○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(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* 등) 하는 한편,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, 탄력근로제**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으며,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, 지역별 설명회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.

* 노선버스 지원현황: ('18) 16개 업체 1,509명, 20억9천7백만원

('19.1~4월) 25개 업체 3,008명, 40억2천1백만원

** 예) 2주 단위 도입시 1주차 60시간 근로 시, 2주차는 최대 44시간까지 가능

○ 한편,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,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하였다.

- 또한,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지더라도 실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지원하기로 하였다.

* 경기도 수원여객의 경우, 실근로시간을 단축했으나 단체협약 체결이 늦어져 지원을 못 받았으나, 최근 노동부 밀착지원을 통해 애로사항을 파악, 약 25억원 지원 예정

□ 아울러,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, 인허가,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권한으로 시내버스의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□ 또한, 양 장관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재원이 필요하기에 고용기금,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도 최대한 지원 계획이나, 현실적으로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에 입장을 같이 하였다.

○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('07년, '11년, '15년)로 요금을 인상하였고, 다른 지역도 '12~'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, 수년에 한번 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,

-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금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.

□ 양 부처 장관은 자동차노련의 5.15 총파업 예고에 대해 “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, 중앙정부,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”며

○ “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,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김중욱 사무관(☎ 044-201-3832), 고용노동부
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서기관(☎ 044-202-754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